

[노동] 사라진 공약, 반복되는 노동시장 문제들

2014.01.28 | 김수현 연구원 | sida7@saesayon.org

새사연은 2008년부터 매 년 진보 정책 연구소 최초로 <전망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경제, 주거, 노동,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세계의 흐름 속에서 한국 사회를 진단하여 사회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고 새로운 사회로의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014년 전망 보고서 역시 총 8회에 걸쳐 연재됩니다.

1. 2013년 노동시장 동향

박근혜 정부 첫 해인 2013년은 2012년과 마찬가지로 금융위기 이후 크게 악화되었던 고용지표가 회복세를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통해 살펴보면 2013년의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은 각각 59.5%, 61.5%, 3.1%로, 전년대비 고용률은 0.1%p, 경제활동참가율은 각각 0.2%p 상승하였으며, 실업률은 0.1%p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 연도별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추이 (단위 : %)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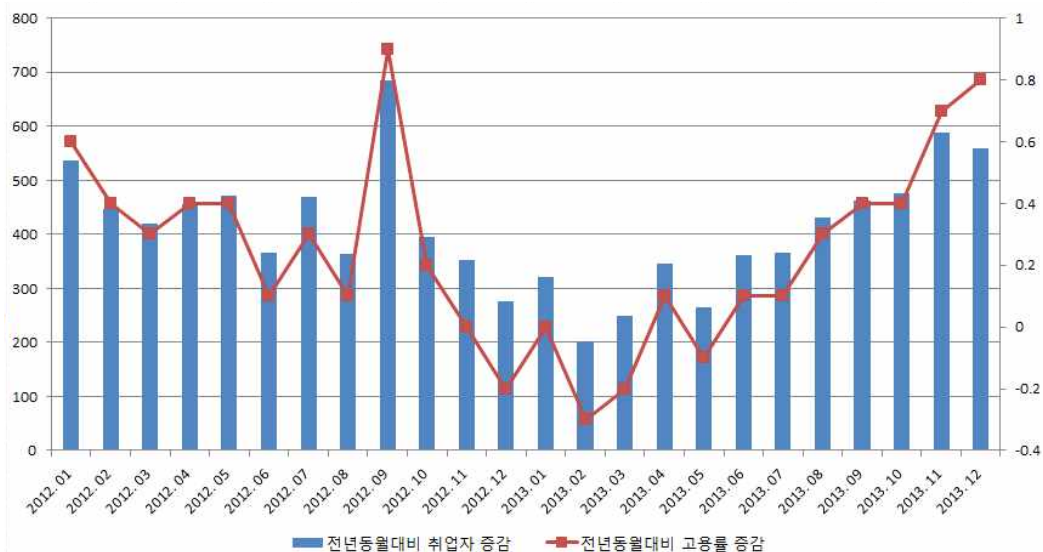
※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은 좌측 축, 실업률은 우측 축을 참조할 것

2014년 전망 보고서

이에 따라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58.8%, 60.8%까지 낮아졌던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은 박근혜 정부 첫 해 이명박 정부 첫 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2013년 들어서도 이전의 회복세가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상반기 주춤했던 취업자 수 증가세가 하반기 들어 회복되었기 때문이다. 2013년 상반기 취업자 수 증가는 전년 동기 대비 29만 명 수준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2월과 3월, 5월은 전년 동월 대비 고용률이 0.3%p, 0.2%p, 0.1%p 하락하기도 했다. 하지만 하반기 들어 전년 동기 대비 48만 명 수준으로 취업자 수 증가세가 회복되면서 전년대비 38만 4천 명의 취업자가 늘어날 수 있었고 고용률도 전년대비 0.1%p 상승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림 2] 전년 동월대비 고용률 및 취업자 수 증감 (단위 : %p, 천 명)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전월동월대비 취업자 증감은 좌측 축, 고용률 증감은 우측 축 참조

이와 함께 여성 고용률 상승과 중고령 노동자들의 노동시장 진입 확대가 2013년 노동시장 지표 개선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과 여성을 나누어서 보았을 때 2013년 남성의 고용률과 경제활동참여율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거나 낮아진 것으로 나타난 반면, 여성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은 각각 0.4%p, 0.3%p 상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성 고용률의 경우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크게 상승한 것이다.

2014년 전망 보고서

연령대별로는 나누어 보면 2012년과 마찬가지로 50대와 60대 중고령층의 취업자 수 증가세가 전체 취업자 수 증가를 이끈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작년과 비교해 50대와 60대 취업자 수는 각각 4.7%, 5.8% 증가하여 560만 6천 명, 328만 9천 명이 된 반면, 20대와 30대 취업자 수는 1.2%, 0.4% 감소해 356만 9천 명, 573만 5천 명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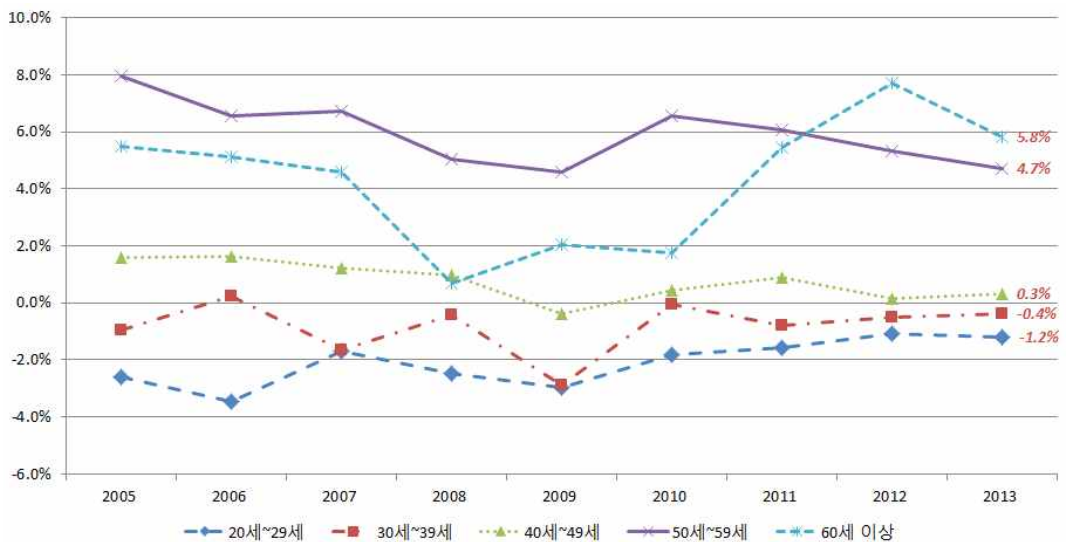
[그림 3] 성별 고용률 및 경제활동참가율 (단위 : %)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남성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은 좌측 축, 여성은 우측 축 참조

[그림 4] 연령대별 전년대비 취업자 수 증가율 (단위 : %)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4년 전망 보고서

산업별로는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전년대비 15만 5천 명 증가해 2013년에도 가장 많은 취업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지난해에도 전년대비 8만 8천 명이 증가해 취업자 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산업이었는데, 민간수요 증대를 바탕으로 금융위기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취업자 수 증대를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많이 늘어난 산업은 제조업으로 전년대비 7만 9천 명의 취업자가 늘어났다. 수출을 바탕으로 상반기에는 전년 동기대비 12만 5천 명의 취업자가 늘어났으나, 하반기 들어 전년 동기대비 3만 8천 명 수준으로 취업자 증가 속도가 둔화되면서 결국 2013년 평균으로는 7만 9천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숙박 및 요식업(6만 5천 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5만 7천) 등의 산업에서 취업자가 많이 늘어났다.

[표 1] 산업별 취업자 수 변화 추이 (단위 : 천 명)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3년 -2012년
계	23,829	24,244	24,681	25,066	385
농업 임업 및 어업	1,566	1,542	1,528	1,520	-8
광업	21	17	15	16	1
제조업	4,028	4,091	4,105	4,184	79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사업	78	76	76	90	14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	65	71	73	73	0
건설업	1,753	1,751	1,773	1,754	-19
도매 및 소매업	3,580	3,638	3,689	3,660	-29
운수업	1,280	1,332	1,380	1,413	33
숙박 및 요식업	1,889	1,854	1,906	1,971	65
출판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668	703	700	692	-8
금융 및 보험업	808	846	842	864	22
부동산업 및 임대업	517	486	486	485	-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883	961	1,028	1,022	-6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023	1,086	1,116	1,173	57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960	951	951	966	15
교육 서비스업	1,799	1,686	1,744	1,748	4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153	1,311	1,399	1,554	155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80	417	409	392	-17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1,216	1,261	1,286	1,312	26
가구내고용활동 및 미분류 자가소비생산활동	150	153	166	172	6
국제 및 외국기관	13	13	9	7	-2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반면, 2000년대 계속 취업자 수가 줄어들다 금융위기 이후 취업자 수 증가세로 돌아섰던 도매 및 소매업의 경우 2013년 들어 전년대비 2만 9천 명의 취업자가 감소해 취업자가 가장 많이 감소한 산업이 되었다. 도매 및 소매업은 지난 2011년, 2012년 연속으로 전년대비 취업자 수가 5만 명 이상 늘어났던 산업이다(2011년 5만 8천 명, 2012년 5만 1천 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도 2011년과 2012년 전년대비 취업자 수가 증가하던 산업이었는데, 2013년 들어서는 전년대비 취업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2011년 7만 8천 명, 2012년 6만 7천 명의 취업자가 증가했으나 2013년에는 6천 명의 취업자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지속되고 있는 노동시장 문제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양적 고용지표는 이명박 정부에서와 마찬가지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전년대비 고용률이 0.4%p 늘어난 2011년이나 0.3%p 늘어난 2012년만큼은 아니지만, 고용률 증대가 지속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전년대비 취업자 수도 2011년 41만 5천 명, 2012년 43만 7천 명에는 못 미치지만 38만 5천 명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문제는 이명박 정부의 노동시장 정책과 분명히 다른 정책을 펼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던 박근혜 정부의 출범 이후에도 고용의 질적 측면 개선은 요원하며 이전 이명박 정부 하에서의 노동시장 문제들이 개선될 가능성을 보이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먼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 그 규모와 비중은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일자리에 직면해 있으며 노동시장 내에서 받는 차별적 대우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현재 비정규직 규모는 고용형태만으로 비정규직을 정의하는 정부 통계를 따를 경우 임금근로자의 32.6%이고 고용형태와 함께 종사상 지위를 통해 비정규직을 구분하는 노동계의 통계를 따를 경우 45.9%이다. 이는 2012년에 비해 정부의 통계를 따를 경우 0.7%p, 노동계 통계를 따를 경우 1.9%p가 줄어든 것이다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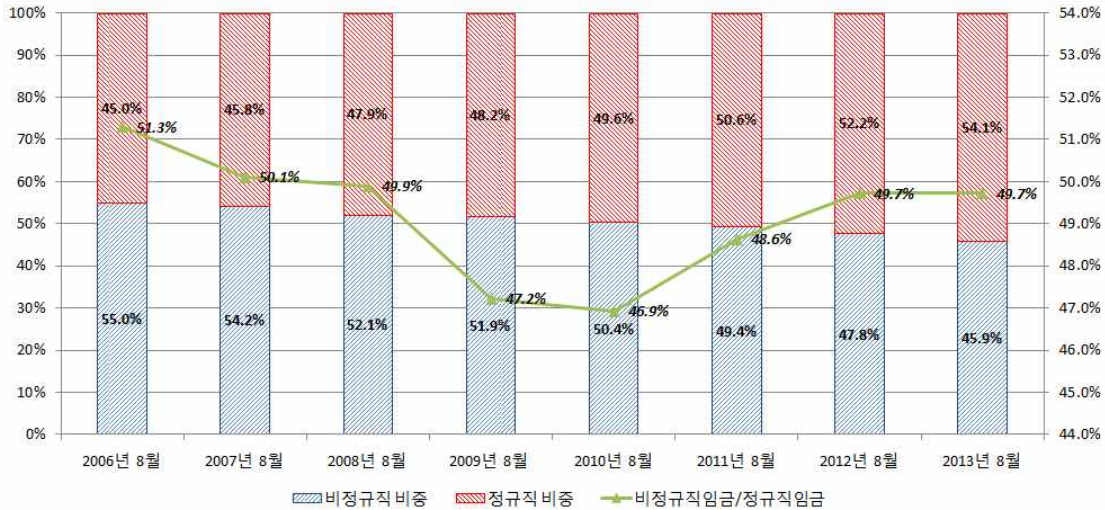
노동계의 비정규직 개념을 통해 비정규직 비중을 추산해보면 1997년 경제 위기 이후 급격하게 늘어나던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이 200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

1) 노동계의 비정규직 개념은 “김유선 (2013)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3.8) 결과, 한국노동사회연구소”를 참조할 것

2014년 전망 보고서

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임금근로자의 절반에 가까운 이들이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 일자리에 직면해 있는 것이 우리 노동시장의 현실이다.

[그림 5] 비정규직 비중 및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수준 (단위 : %)



출처 : 각 연도 8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이용 추산

※ 비정규직 비중은 좌측 축,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수준은 우측 축 참조

이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직면해 있을 뿐만 정규직의 절반도 안 되는 임금을 받고 있다. 2013년 8월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월평균 임금은 141만 원으로 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 283만 5천 원의 49.7% 수준 밖에 되지 않는다.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정규직 노동자 임금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는데, 2011년과 2012년도에 약간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2013년에는 큰 개선을 보이지 않았고 여전히 비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정규직 노동자 월평균 임금의 절반 이하 수준에 머물러 있다.

[표 2]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및 노동조건 적용률(2013년 8월, 단위 : %)

	(직장)	건강보험 (직장)	고용보험	퇴직금	상여금	시간외 수당	유급휴가	주5일제	근로계약 서면작성
임금노동자	67.6	71.3	62.4	68.2	69.5	47.5	60.0	66.4	55.4
정규직	96.8	98.8	83.8	99.3	96.6	71.7	89.3	83.5	65.1
비정규직	33.0	38.9	37.1	31.4	37.5	18.9	25.4	46.2	44.1

출처 : 김유선 (2013)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3.8) 결과, 한국노동사회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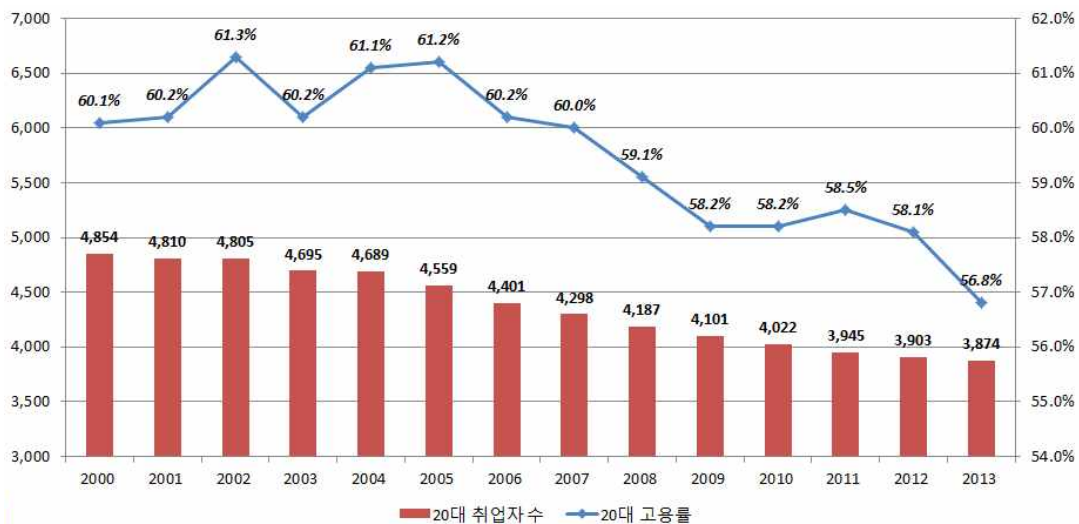
2014년 전망 보고서

임금을 제외한 다른 지원에 있어서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의 경우 정규직 노동자들은 대부분 직장 가입을 통해 보험료 지원을 받는 반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직장가입률은 33%~39% 수준 밖에 되지 않았다. 고용불안정과 낮은 소득으로 인해 사회보험의 필요성이 더 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오히려 사회보험 지원에서 차별받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퇴직금, 상여금, 수당 등에 있어서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큰 차별에 직면해 있으며 이러한 현실은 개선되지 않은 채로 지속되고 있다.

청년고용문제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문제 중 하나이다. 20대 청년층 노동자의 경우 취업자 수와 고용률이 모두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7년 500만 명이 넘었던 20대 청년층 취업자 수는 2000년대 들어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3년 387만 4천 명 수준으로 줄어들었으며, 고용률 역시 2000년대 중반 이후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013년의 20대 청년층 고용률은 56.8%로 2012년보다 1.3%p나 하락했다.

특히,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절대적인 취업자 수 감소와 함께 고용률도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청년층 인구 감소 속도보다 빠르게 청년층 취업자 수,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6] 20대 청년층 취업자 수 및 고용률 추이 (단위 : 천 명, %)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20대 청년층 취업자 수는 좌측 축, 고용률은 우측 축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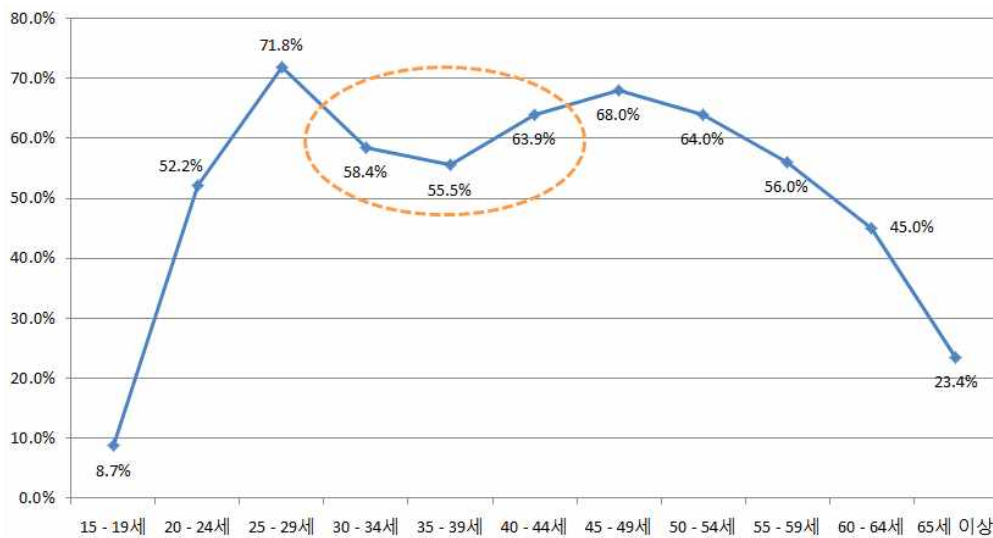
2014년 전망 보고서

이러한 청년취업자, 청년일자리의 감소는 현재 심각한 청년고용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청년일자리의 부족은 구직을 포기한 실망실업자를 증가시키고 있으며 대학졸업장을 가지고도 일자리를 찾지 못한 이들을 양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청년층의 증가는 청년빈곤층, 청년신용불량자의 증가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로도 이어지고 있으며 청년고용문제가 지속될 경우 장기적으로 생산에 참여하는 노동력 부족, 숙련부족 등의 문제로 이어져 경제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난 이명박 정부는 이런 청년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창업지원, 청년인턴제, 청년층의 해외취업지원, 단기일자리 창출 등과 같은 여러 정책을 실시했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이명박 정부 임기 내내 청년층 취업자 수와 고용률의 하락세는 지속되는 양상을 보였다. 그리고 이러한 양상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청년고용문제와 함께 여성들이 직면하고 있는 노동시장 문제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여성 취업자 수가 천만 명을 넘어섰지만 여전히 여성 고용률은 남성 고용률에 비해 20% 이상 낮은 현실이 계속되고 있다. 2013년에도 남성의 고용률은 70.8%인데 반해 여성의 고용률은 48.8% 밖에 되지 않았다. 아직도 절반 이상의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림 7] 연령대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단위 : %)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이러한 낮은 여성 고용률은 여러 가지 원인에 기인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결혼, 출산,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연령별로 그려보면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들과 달리 M자 형태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결혼, 출산, 육아로 인해 30대 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퇴장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경력단절로 인해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낮은 여성 고용률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직면하는 차별이 계속되고 있는 점 역시 큰 문제이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3년 8월 현재 여성 임금근로자들의 평균 임금은 156만 6천 원으로 남성 임금근로자 평균 임금 264만 6천 원의 6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큰 임금 격차의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이야기되고 있지만, 유리벽, 유리천장과 같은 차별적 요인이 미치는 영향도 큰 것이 사실이다. 노동시장 내 여성이 직면하고 있는 이와 같은 차별적 현실이 계속될 경우 빈곤의 여성화와 같은 사회적 문제가 더욱 심각해 질 수 있으며 여성 고용률 저하로도 이어져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3. 사라진 노동시장 공약들, 2014년은?

그렇다면 박근혜 정부 첫 해 이명박 정부 내내 문제시 되어왔던 노동시장 문제들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아직까지 새로운 노동시장 정책들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다. 비정규직 문제, 청년고용문제, 여성고용문제 등은 이명박 정부 내내 노동시장에서 이야기되었던 문제들로 한 해 동안의 정책만으로 쉽게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를 바로잡으려는 정책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대선 시기 이명박 정부의 노동시장 정책과는 다른 고용의 양적 지표뿐만 아니라 고용의 질적 측면을 개선하겠다는 것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하지만 지난 1년 동안 이러한 정책들은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대선 시기 박근혜 대통령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노동시장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희망사다리법” 제정을 추진할 것으로 약속했다. 이를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가 받는 차별을 시정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당시 비정규직 노동자 자체를 줄이는 정책이 되지는 못한다는 측면에서 비판받기도 했지만, 지금은 그 당시 약속했던 차별을 줄이는 정책도 추진되지 않고 있다.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도 마찬가지이다. 내년부터 소위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라는 정부가 추진하는 시간제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주의 보험료를 정부가 지원하는 예산안은 만들어졌지만 저임금 노동자들이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원해 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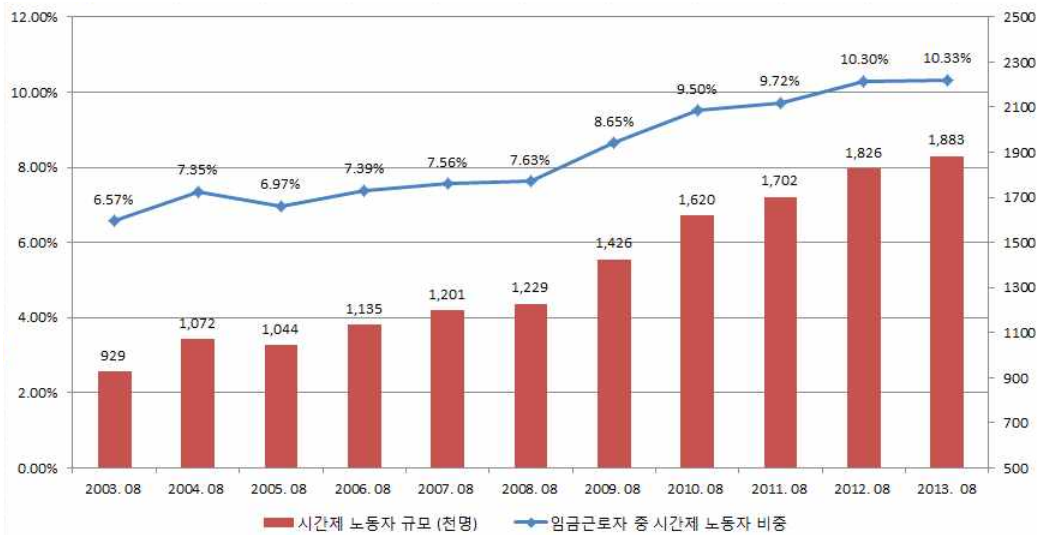
2014년 전망 보고서

을 사회보험의 테두리에 포함시키겠다는 정책은 여전히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 성과를 내지 못한 정책을 이어받은 것도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청년고용문제 해결과 관련해 창조경제의 성공이 청년 고용 증대를 이끌 것이라는 것 외에 이명박 정부의 청년고용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는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구체적인 창조경제 관련 정책이 실시되지 않고 있는 지금, 이명박 정부에서 시행해 성과를 거두지 못한 청년창업지원제도와 청년인턴제 등이 여전히 청년고용문제의 주요 해결방안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청년고용문제는 2013년 더욱 심각해지는 양상을 보였다.

여성 고용문제 해결 정책도 아직까지 이명박 정부 때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여전히 일자리의 질적 측면을 개선시키기 보다는 노동공급 중심의 해결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14년에는 박근혜 정부가 여성 고용률 증대의 핵심 정책이라 이야기하는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데, 이명박 정부가 시행했던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과 어떤 차이를 보일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역시 낮은 여성 고용률 제고를 위해 이명박 정부가 시행했던 정책으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어 여성들이 더 쉽게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지 못했고 여성 고용률 제고에도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림 8] 시간제 노동자 규모 및 비중 추이 (단위 : 천 명, %)



출처 : 각 연도 8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시간제 노동자 규모는 우측 축, 비중은 좌측 축 참조

이러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 정책의 실현가능성이나 성과에 대한 의문들은 박근혜 정부의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 정책에서도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는데, 좋지 않은 시간제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오히려 좋지 않은 일자리를 늘이는 결과를 낳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과 비슷한 노동시장 정책들을 내며 새로운 노동시장 정책을 약속했다. 하지만 공약으로 내세웠던 새로운 정책들은 여전히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이전 이명박 정부에서의 정책들이 여전히 전체 노동시장 정책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이 계속될 경우 2014년 역시 이전 이명박 정부 시기와 마찬가지로 고용의 양적 지표는 나아질지 몰라도 고용의 질적 수준은 크게 개선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될 수 있다. 또한 경제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지금의 정책들만으로는 청년고용문제나 여성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4. 양질의 일자리를 중심으로 한 노동시장 정책 시행되어야

이상 2013년의 노동시장 상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2014년에도 지금과 같은 노동시장 정책들이 유지될 경우 고용의 양적 측면 지표들은 개선될지 몰라도 청년고용문제, 여성고용문제, 노동시장 불평등, 양극화 등으로 산재하는 노동시장 문제들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경제상황이 좋아질 경우 일자리 증가를 통해 청년고용문제나 여성고용문제는 어느 정도 개선을 보일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노동시장 내 불평등과 양극화, 차별 등의 문제들을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노동시장에서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중심으로 하는 노동시장정책이 새롭게 수립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이는 이제까지 이명박 정부 하에서 추진되었던 유연한 노동시장 정책과 다른 정책이 추진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박근혜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노동시장의 질적 측면 제고 정책이 이제라도 시행되어야 하며 질적 측면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정책도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연한 노동시장 정책은 고용의 질적 수준 제고와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에는 효과를 발휘하기 힘들다. 그동안 정부에 의해 추진되었던 유연한 노동시장 정책들은 경제위기 상황에 직면할 때마다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국민들의 삶을 위협해왔다. 기업은 불안정한 일자리들을 양산했고, 해고의 위협에 노출된 노동자들은 이런 불안정한 일자리들을 받아들여야만 했다. 이 과정에서 노동시장의 불평등과 양극화, 차별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고, 좋지 않

2014년 전망 보고서

은 일자리의 양산은 청년고용문제와 여성고용문제로도 이어지고 있다.

반면, 양질의 일자리를 기반으로 한 노동시장정책은 고용의 양적 측면의 확대와 함께 노동시장의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결하는 등 고용의 질적 측면 개선도 목표로 하는 정책으로, 단순히 고용지표의 양적 개선을 위해 일을 해도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는 일자리를 만들기보다는 일을 통해 빈곤을 벗어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해당 일자리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생계를 안정시키고 고용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정책이다. 또한 현재 불안정한 일자리에 종하고 있는 노동자나 노동시장으로부터 배제되어 빈곤상태에 직면한 사람들을 위한 적절한 복지시스템을 제공하고,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를 줄이고 고용안정성을 확대시켜 노동시장 내 불평등과 양극화를 줄일 수 있는 정책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양질의 일자리를 중심으로 하는 노동시장정책은 성공할 경우 고용의 양적 지표 개선이라는 성과와 함께 현재 산재해 있는 많은 노동시장 내 문제들의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지만, 많은 재정이 필요하고 단기적으로 성과가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진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고용의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 모두를 개선시키고 안정적인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중심으로 하는 노동시장 정책이 더욱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된다.

나아가 이러한 양질의 일자리 확대정책은 내수를 활성화함으로써 안정적인 경제체제 구축에도 일조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진다. 양질의 일자리 확대가 국민소득의 증진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소비와 생산으로 이어지는 양질의 일자리를 기반으로 한 성장의 선순환 구조가 성공적으로 구축될 경우 우리는 지금의 수출중심, 자산 중심의 경제체제보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면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새사
연

2014년 전망 보고서

2014년 전망 보고서 목록

날짜	분야	제목	작성자
1월 15일	세계경제	지뢰밭 속 순항?	정태인
1월 16일	한국경제(1)	스스로 지뢰밭을 만드는 박근혜 정부	정태인
1월 17일	한국경제(2)	747에서 474로 갈아탄 근혜노믹스	여경훈
1월 20일	복지정책(1)	박근혜 정부식 보건 의료, 민영화 폭탄	이은경
1월 21일	돌봄정책	진정한 '국가 책임 보육'이 되려면	최정은
1월 24일	주거정책	주택시장 죽이기에 골몰하는 정부	강세진
1월 28일	노동 · 고용	사라진 공약, 반복되는 노동시장 문제들	김수현
1월 29일	복지정책(2)	추후 공개	이은경
2월 3일	종합	추후 공개	새사연

2014년 전망 보고서 발간

불안한 미래, 한국 사회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는 2014년 전망 보고서. 현재의 위치와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경제/노동/주거/복지 분야]

정회원 가입하기

새사연은 회원들의 참여와 후원으로 운영되는 독립 민간 연구원입니다. 2012년 한국경제신문 선정, 국내 100대 싱크탱크 4위, 더 나아가겠습니다.